

# 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전화 051-802-0916

www.bssimin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부산대선미디어감시연대2022-02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대선보도모니터] '개발 공약'만 부각한 지역언론
• 날 짜	소수정당 홀대가 '사회적 약자 공약' 홀대로 이어져 2022년 02월 09일

## ‘개발 공약’만 부각한 지역언론 소수정당 홀대가 ‘사회적 약자 공약’ 홀대로 이어져

모니터 기간	2022년 01월 24일(월) ~ 2022년 02월 06일(일)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 KBS부산, 부산MBC, KNN 메인뉴스

20대 대선에선 작은 공약과 짧은 문장의 정책이 선거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자, 다음 대통령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중책이 있음에도 ‘심쿵약속’, ‘소확행’이라는 네이밍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다.

짧고 간결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류에 편승한 정치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유권자다. 목적, 가치, 실현 방안 등 공약을 발표할 때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이 모두 생략된 ‘7자 공약’ 발표는 유권자를 찬성과 반대로 나눌 뿐, 더 나아진 사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가로 막았다.

논의해야 할 이슈를 찬반이슈로, 짧게 전달하는 대통령 후보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언론이 묻고 따져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보도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지역언론의 정책·공약 보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지난 3일 처음으로 ‘2022 대선후보 토론’이 열렸다. 120분 남짓의 시간에 후보 4명의 정책, 공약이 온전히 담기긴 어려웠다는 평이 전반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원자력발전과 같이 부산 지역과 밀접한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를 지역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살펴봤다.

설 연휴가 길었던 탓에, 부산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이번 2차 보고서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을 모니터 대상으로 하며, TV토론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선 모니터 기간이 아니어도 관련 기사를 포함했다.

## 연휴엔 선거보도도 쉽니다?

### 'TV토론' 지역언론이 전달할 내용 정말 없었나

보도량을 보면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설 연휴 기간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방송3사 모두 리포트 1건이 선거보도의 전부였다. 방송3사의 선거보도는 대체로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다거나, 지역 선대위가 캠페인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발생이슈를 전달하는데, 그 탓에 설 연휴 기간 선거보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KBS부산의 경우 연휴가 시작된 1월 29일(토)부터 2월 5일(토) 일주일 간 유일한 선거보도는 <“여야, 부산 경제 회생시킬 공약 내놔야”>(1/30, 첫 순서 리포트)로 부산경제계(상공회의소)의 정책 건의에 대해 여야가 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부산MBC는 26일 10번째 단신, KNN은 26일 8번째 단신으로 부산상의회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책 건의를 한 사실을 전달한 바있다.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리포트	단신	리포트	단신	리포트	단신	기 사	사 진	기 고	사 설	기 사	사 진	기 고	사 설
01월24일(월)	0	0	0	1	0	0	5	0	1	2	6	1	1	1
01월25일(화)	1	2	0	0	2	0	7	0	1	0	8	1	0	1
01월26일(수)	1	0	0	1	0	1	8	0	0	0	7	0	0	1
01월27일(목)	1	0	0	1	0	1	3	0	1	0	7	0	0	1
01월28일(금)	1	1	1	1	1	0	6	0	0	1	4	0	0	1
01월29일(토)	0	0	0	0	0	0	<휴간>				<휴간>			
01월30일(일)	1	0	0	0	1	0								
01월31일(월)	0	0	0	0	0	0								
02월01일(화)	0	0	0	0	0	0								
02월02일(수)	0	0	1	0	0	0								
02월03일(목)	0	0	1	0	0	0	3	0	0	1	4	0	1	1
02월04일(금)	0	0	1	0	0	0	5	0	0	1	5	1	2	1
02월05일(토)	0	2	1	1	0	1	<휴간>				<휴간>			
02월06일(일)	1	0	1	0	1	0								
합계	6	5	6	5	5	3	37	0	3	5	41	3	4	7
총 보도 건수	11건		11건		8건		45건				55건			

<표1> 지역언론 5개사 보도건수 및 기사 유형



△ (좌) KBS부산 대선기획 (우) 부산MBC, 2/4

한편 KBS부산은 이번 모니터 기간 방송3사 중 유일하게 선거보도 기획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선 후보에게 지역을 묻다’로 1월 26일, 27일, 28일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지역총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기획의 첫 리포트는 △지방소멸 △2차 공공기관 이전 △의료격차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의 공통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과 생각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지역의 주요 사안인 원전 이슈는 별도 리포트로 구성해 전달했다는 점이다.

KBS부산은 지역의 공통현안에 이어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기획 리포트로 전달했다. KBS부산이 꼽은 지역현안은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부울경메가시티 △2030월드엑스포 △북항 앞바다 UN해양도시 △어반루프 도입 △청사포 앞 해상풍력 단지 △경부선 철도지하화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등이었다. 특기할 점은 부산 시장 추진 정책이긴 하나, 부산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부산 지역현안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해당 리포트 역시, 후보별 입장이 같다, 다르다, 찬성이다, 반대다 등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부산MBC는 지역언론 5개사 중 유일하게 3일에 열린 ‘2022대선 후보 토론’을 지역의 관점으로 조명해 전달했다. <대선 토론, 지역이슈 실종>(2/4, 첫 순서 리포트)은 첫 대선 토론이 국민적 관심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오갔다면에서도 소멸위기 비수도권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논의는 실종됐다고 짚었다. 원전 정책 역시 에너지 대책으로 논의됐을 뿐, 비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선 토론이 목요일(3일) 저녁에 열리면서, 지역신문은 이 소식을 금요일에 사진으로만 실었다. 이후 부산일보의 경우 <‘친원전’ 윤석열, TV토론서도 핵폐기물 처리 無해법>(2/4)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며, 윤 후보의 원전 낙관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 7일자 정치면의 이슈는 가덕신공항과 2030부산엑스포 추진에 대한 후보 입장이었다.

후보 공약,  
검증과 비판 보이지 않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를 주제별로 보면 정책·공약 보도의 비중이 컸다. 건수로 보면 부산일보가 18건, 국제신문 16건, KBS부산 6건, 부산MBC와 KNN은 각각 4건이었다.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공약	6건 (54.5%)	4건 (36.3%)	4건 (50.0%)	16건 (35.5%)	18건 (32.7%)	48건
후보·정당 행보	4건 (36.3%)	4건 (36.3%)	3건 (37.5%)	8건 (17.7%)	6건 (10.9%)	25건
선거전략· 판세	0건	2건 (18.1%)	1건 (12.5%)	11건 (24.4%)	23건 (41.8%)	37건
의혹·논란	0건	0건	0건	1건 (2.2%)	3건 (5.4%)	4건
갈등·공방	0건	1건 (9.0%)	0건	6건 (13.3%)	4건 (7.2%)	11건
기타	1건 (9.0%)	0건	0건	3건 (6.6%)	1건 (1.8%)	5건
합계	11건	11건	8건	45건	55건	130건

<표2> 대선 보도 주요 주제

정책·공약 보도는 △정책·공약 발표를 단순 전달한 경우(11건) △경제계, 시민사회 등에서 대선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한 경우(20건) △후보나 정당의 행보 중 정책·공약 발표를 주요하게 언급한 경우(7건) △후보의 정책·공약을 선거전략 중 하나로 분석하는 경우(5건)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를 후보 간 갈등·공방으로 부각하는 경우(2건) △정책·공약을 비판하는 경우(3건) 등의 경향을 보였다.

먼저, 지역언론에서 전달한 경제계·시민사회 등의 정책 제안은 해양특별자치시, 지방분권개헌,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야가 주를 이뤘다. 부산일보는 이번 모니터 기간 나온 사설 7건 중 3건에서, 국제신문은 사설 5건 중 2건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일보의 경우 정책·공약 보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기 보다는 각각의 공약 발표를 나열하거나, 공약을 발표한 ‘장소’에 주목하면서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공약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 <이 “경기 전역 30분대 연결” 윤 “대북 억제력 강화”>와 2월 3일자 4면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사의 문제점은 후보의 공약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교통 정책과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은 두 후보가 24일에 발표했다는 것 외 이렇다할 공통분모가 없다. 사법고시 부활과 사드 추가 배치도 마찬가지다. 사법고시 부활을 후보가 공약으로 냈다면 공약 발표의 배경, 실현 방안,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내 유권자가 이러한 공약 필요성 여부에 대해 생각하게 해야 하지만, 신문지면에선 상대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과 나란히 제시됐다.

이번 모니터 기간, 정책·공약 비판 보도 중 부산일보의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이고 사는 PK 주민 어찌라고”>(1/27, 5면)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사가 비판하고 있는 시점은 1월 24일로, 이날 있었던 환경 관련 공약 발표와 한신협 인터뷰에서의 윤 후보 발언을 비판했다. 이 내용은 25일자 부산일보에 실린 윤석열 후보 인터뷰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 개발 공약 외 대선 공약, 지역언론에 보이지 않아 심상정 후보의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 여전히 홀대

매체별 후보 언급 빈도 및 보도경향을 살펴봤다. 기사에서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단순 언급’으로, 전체 기사 흐름 속에서 특정 후보를 강조하거나 후보 단독 기사일 경우는 ‘우세 언급’으로 집계했다.

방송3사의 경우 주요 선거보도 경향이 후보·정당 행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부산 방문여부가 후보 언급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했을 때, 이 시기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우세 언급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신문의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단순’, ‘우세’ 언급이 동일했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부산일보 역시 1~2회의 차이는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후보 언급에서 가장 문제로 보인 지점은 부산을 방문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역언론의 홀대이다. 특히 부산일보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는 단 2번 등장했는데, 모두 대선후보 4명을 언급한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도 심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사실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의 부산방문 역시 ‘사진 기사’ 1건으로 갈무리 하였으며, 이외 안 후보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이 야권 단일화에 초점 맞춰졌다.

단순 언급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7회	3회	5회	19회	24회
윤석열	3회	2회	3회	19회	26회
심상정	1회	1회	1회	7회	2회
안철수	3회	1회	1회	8회	10회

<표3> 기사 내 후보 '단순 언급' 빈도

우세 언급	KBS부산	부산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4회	2회	2회	9회	4회
윤석열	0회	0회	0회	9회	5회
심상정	1회	0회	0회	2회	0회
안철수	0회	0회	0회	3회	4회

<표4> 기사 내 후보 '우세 언급' 빈도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를 '우세언급'한 국제신문의 경우, 이 기간 심상정 후보 인터뷰 기사를 1월 25일자 1면과 4면에 배치했다.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정치철학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지역언론의 소수정당 후보 홀대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이유는, 후보를 홀대함으로써 후보가 주장하는 가치와 후보가 대변하는 국민을 홀대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지역언론에선 가덕신공항, 2030부산엑스포, 공공기관2차이전, 지방분권 개헌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인권, 복지, 기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후보 공약 조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 부산일보, 국제신문 후보인터뷰 질문을 살펴봤다 윤석열 후보에 가장 많은 질문한 부산일보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서는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국제신문은 1월 25일에 심상정 후보 인터뷰를 실었고, 부산일보는 1월 26일엔 윤석열 후보, 1월 27일엔 안철수 후보 인터뷰를 실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신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안철수, 12월 29일 이재명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했고, 부산일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이재명 후보 인터뷰 질문까지 포함해 비교해 봤다(참고 <표5>).

먼저 국제신문은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순으로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한 달 간격으로 보도가 이뤄져 질문 간 연속성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럼에도 11월 18일자 4면에 실린 안철수 후보 인터뷰는 두 후보에 비해 기사 분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 상, 공약·정책보다는 출마의 변에 가까운 내용 구성을 다소 아쉬웠다(첨부 <표 6>).

국제신문	부산일보
<p>[안철수] 11월 18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끝까지 완주...국힘이 양보하면 압도적 정권교체 가능"(4면, 3단기사)</li> </ul> <p>[이재명] 12월 29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덕신공항, 새만금처럼 끌면 안돼"(1면, 머리기사)</li> <li>- "메가시티는 재정지원이 핵심...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필요"(4면, 5단기사)</li> </ul> <p>[심상정] 1월 25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기득권 조정없이 균형발전 운운 비겁"(1면, 하단 4단기사)</li> <li>- "70년 된 노동법 제 구실 못해 개정 필요요주 4일제로 가자"(4면 6단기사)</li> </ul>	<p>[이재명] 12월 28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부산월드엑스포 반드시 유치하겠다"(1면, 머리기사)</li> <li>- "지방소멸은 곧 국가 소멸...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3면, 6단기사)</li> </ul> <p>[윤석열] 1월 26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 "산은 부산 이전, 단독으로 관철 시키겠다"(1면, 4단기사)</li> <li>-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상생기업 적극 지원하겠다"(4면, 6단기사)</li> </ul> <p>[안철수] 1월 27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철수 "지방 소멸 막으려면 민간 기업 지역 분산해야"(1면, 4단기사)</li> <li>- "2030-중도층 결집 확산, 남은 40여 일이면 충분"(4면, 6단기사)</li> </ul>

<표5> 국제신문, 부산일보의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 제목

부산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의 인터뷰 기사 모두 1면에 노출했지만, 이재명 후보만 머리기사로 올렸다. 부산일보의 질문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후보별 질문의 특색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가족리스크에 대한 입장, 전두환 공과 발언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철학, 논란 발언, 가족리스크 등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발언(손발 노동, 주 120시간제 등)이 논란 속에 있었음에도 이를 '논란' 대신 '노동 개혁'이라 질문을 던져 눈에 띄었다(첨부 <표7>). 또 윤석열 후보와 비슷한 시기 인터뷰한 안철수 후보 기사에는 정책이나 공약 관련 질문은 거의 없고, 출마 결심 및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져 차이를 보였다. 언론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후보에 대한 인상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동정이나 행보 중심의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

## 부산일보가 보도한 한신협 2차 여론조사, 1차와 무엇이 달랐나

부산일보가 속해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선 여론조사를 12월말, 1월말, 대선직전 이렇게 3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 기간 유일한 여론조사 결과



1차 여론조사 당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물었던 문항이 2차에선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1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온 <지방 잘 살릴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순> 제목의 기사가,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해 공약을 발표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월 25일자에는 <윤일화든 안일화든...보수 야권 단일화 '필승 카드' 재확인> 기사가 실렸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 가능할 정도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야권 선거전략 측면에서 분석해 서술했다.

## 지방 잘 살릴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 순

**이재명 40.2% 오차범위 내 1위**  
**윤석열 36.8%, 안철수 7.6%**

**지방분권 강화 필요' 75.5% 동의**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강화 등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30일 발표된 한국지방선언협회-조원씨앤이의 전국 정치사회 현안 여론조사에서는 지방 부흥 적임자'를 뽑아 달라고 별도 문항으로 물었는데 이 후보는 여기서 선순도 40.2%를 받아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36.8%)를 오차범위 내(±1.8%)에서 따돌렸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지방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라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의 경우 다자대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지지를 39.5%보다 2.7%p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윤 후보를 지지자는 2.7%p는 지방을 잘 살릴

다. 결과 수치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않았지만 이 후보가 다자대결 지지율(39.4%)보다 0.8%p 많은 선택을 받은 결과와는 대조된다.

균형발전 적임자로는 박빙이지만 이 후보를 적임자로 보는 추세가 확인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7.6%의 선택을 받은 점도 흥미롭다. 다자구도 지지를 (6.3%)보다 1.3%p 높다. 해당 문항에서 윤 후보를 받지 않은 상당수가 안 후보로 이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 정의당 심상정 3.6%, 새로운미래 김동원 1.7%, 우리공화당 조원진 1.1% 순이었다.

또 하나 이 후보 지지층이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정서도 확인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묻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느냐고 물었는데 이 후보 지지층 85.9%는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3%에 불과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 (단위: %)**

이재명	40.2
윤석열	36.8
안철수	7.6
심상정	3.6
김동원	1.7
조원진	1.1
기타	1.9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 위한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 (단위: %)

필요하다	85.9
필요하지 않다	10.3
아니중요	3.7

전국적으로는 75.5%가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서울과 수도권-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응답자 4명 중 1명(25.3%)이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 23.4%, 인천-경기 21.3% 순으로 분권 강화 '불필요' 응답이 높았다. 나이별, 성별로는 큰 변별력이 없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한국지방선언협회 주최

△ 부산일보(12/31, 5면)

## 윤일화든 안일화든... 보수 야권 단일화 '필승 카드' 재확인

**윤 단일화, 이재명에 11.0%p 앞서**  
단, 2차 9.8%서 40.9%로 급상승  
국립 지지층 75.8% 단일화 희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 4명 중 3명 가량은 3-9 대선에서 보수 야권 단일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발표한 <부산일보>와 한국지방선언 협회의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보수 단일화에 대해 찬성 의견 47.9%, 반대 의견 43.3%로 집계됐다.

표면적으로 찬반 여론은 엇비슷해, 보수 진영과 두 후보 지지층에서는 단일화 요구가 거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8%가 단일화에 찬성(반대 20.2%)였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69.5%(반대 27.7%)가 단일화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도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세 이상에서 유일하게 찬성(56.4%) 여론이 정체 찬성(47.9%)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2.1%) 선순(55.5%)

**윤석열 단일 후보 출마 시 가상대결 지지율 (단위: %)**

윤석열	47.4
이재명	35.8
심상정	5.8

**안철수 단일 후보 출마 시 가상대결 지지율 (단위: %)**

안철수	40.9
이재명	29.9
심상정	5.2

에 반대(찬성 19.8%)하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보수 단일화가 이뤄지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시너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 가능한 정도다.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3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후보 47.4%, 이 후보 35.8%, 정의당 심상정 후보 5.8%로 집계됐다. 안 후보를 포함한 4자 대결시 윤 후보 지지를 42.9%보다 4.5%p 상승한 47.4%

국민의힘 윤석열(왼쪽)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를 이뤄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두 후보가 각각 서울 중영동에서, 경의도의회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안 후보 지지를 변화는 더 극적이다. 안 후보는 4자 대결에서 9.8%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보수 단일화가 되면 40.9%를 기록, 이 후보(29.9%)에 11.0%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 후보는 5.2%로 나타났다.

이 후보로 단일화 시 이 후보 지지율은 35.8%로 4자 대결 지지율(35.5%)과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로 단일화 시 이 후보 지지율은 4자 대결보다 5.6%p 줄고, 그리드는 좀이 눈에 띈다. 총성도가 낮은 이 후보 지지자들이 안 후보에게도 일부 이탈할 수 있다는 예기다. 단일화를 가정한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은 윤석열 11.5%, 안철수 20.2%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화 과정에서 '역선택' 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삼각 단일화 조사는 윤석열 지지층에서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지지 후보 응답을 기피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말 브로' 응답 비율은 윤 후보 단일화에는 1.1%였는데, 안 후보 단일화 때는 10.0%로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은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후보 선택을 미루고 부동층으로 남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회사진기자단·news

△ 부산일보(1/25, 5면)

## 대선 후보 사진 선택에도 신중해야

이번 모니터 기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대선후보 사진을 살펴봤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재명	7회	7회
윤석열	7회	9회
심상정	4회	2회
안철수	5회	6회

〈표8〉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선 후보 사진’ 노출빈도

사진 노출면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노출 건수가 적었는데, 부산일보 2회, 국제신문 4회이었다. 특히 부산일보의 심상정 후보 사진 2회는 4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진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리고 부산일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 사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보였다. 1월 25일자 6면을 들 수 있는데, 6면 머리기사 <’86 용퇴론’ 이어 이재명 7인회 “백의종군”... 여 인적쇄신 가속> 아래에 이재명 후보가 반성의 큰절을 올리는 모습과 나란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윤석열 후보의 기자간담회 모습을 배치했다.

기사 못지않게 사진이 주는 메시지도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진 배치 형평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86 용퇴론’ 이어 이재명 7인회 “백의종군”... 여 인적쇄신 가속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할 것” 정성호 의원 등이 후보 측근들 기자회견서 “임명직 안 맡는다” ‘86 용퇴론’ 맞불려 쇄신 급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내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소속 현직 의원 6명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실 연류 전이기를 돌파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책공약 발표하면서 “문정”로 반성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가진 그룹부터 기록권을 드러내겠다고 발표해 당내 ‘86(80년대 후반~60년대생) 용퇴론’과 맞물려 여론 촉구의 도마노키 인적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과 당 사무총장인 김영민 의원 등 6명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 저희 7명은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7인의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잃은 아규민 전 의원을 앞두고 이호철-양정철-전해철 등 소위 ‘3철’을 비롯한 민주당통합 분재인 후보의 친노(친노·무원) 핵심 참모 출신인 시 9명이 선대위에서 전격 사퇴한 것과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86 용퇴론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에 힘을 보태 달라는 메시지도 비친다.

실제 재선 진문인 김경민 의원이 거론한 86 용퇴론은 당 인력에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86 용퇴론이 나온다. 김경민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라며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 그런 흐름이 있다. 586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이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이 평가 혁신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전 큰절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동비전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에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그것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인적 쇄신에 힘을 살렸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아천사에서 선거 운동 중 기자들과 만나 7인회 회견에 대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86 용퇴론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갔다”며 “저 자신도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부터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특정 정치인의 진퇴에 관한 문제를 제기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86 용퇴론을 두고 당사자들의 불명확한 기류가 나타날 경우 자칫 ‘일타’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비

△ 부산일보(1/25)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배치 사례

- 10 -

[첨부]

안철수 질문	이재명 질문	심상정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공정을 내걸었다. 안철수의 가치는 무엇인가</li> <li>- 첫 번째 공약이 '555성장' 전략이다</li> <li>- 부산을 기반으로 했다면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여론이 있다</li> <li>-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가</li> <li>- 가덕신공항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li> <li>- 부울경에서는 원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li> <li>- 과거 2030세대, 중도층의 강한 지지를 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li> <li>- 후보의 완주 의지에도 관심은 단일화에 쏠린다</li> <li>- 안철수의 실험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li> <li>-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지는 쪽은 감옥 가야 한다고 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권 시 국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우선순위는</li> <li>- 균형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li> <li>- 비호감 대선이라는 여론이 많다</li> <li>-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생각은</li> <li>- 실용과 통합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과의 연정 가능성도 있나</li> <li>- 집권 시 폭넓은 사면을 할 생각이 있나</li> <li>-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꼽아 달라</li> <li>-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li> <li>- 고준위방사선편폐물 저장 문제로 부울경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li> <li>- 울산 산업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궁금하다</li> <li>- 부울경 메가시티로 서부 경남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당만의 공약은 무엇인가</li> <li>-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li> <li>-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방안은 있나</li> <li>-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li> <li>-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극복 방안은</li> <li>- 비정규직과 하청업체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은</li> <li>-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은</li> </ul>

<표6> 국제신문 대선후보 인터뷰 질문 목록

이재명 질문	윤석열 질문	안철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의 조화가 가능한가.</li> <li>- 지역대학 등 지자체가 자생력 강화에 방안은.</li> <li>- 조선업 회생을 위한 공약은.</li> <li>- 기획재정부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li> <li>- 사회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한 복안은.</li> <li>- 형수 욕설 파문, 아들 도박 연루 등 가족 리스크에 입장은.</li> <li>- 전두환 공과 발언 이후 호남 내부에 비판적 시각이 크다.</li> <li>-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 당선 시 사면에 대한 입장은.</li> <li>- 실용적 통일외교 실현 방안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야권 통합에 대한 생각은?</li> <li>- 이번 3.9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를 외면하는 부동층을 끌어안을 방법이 있나?</li> <l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퍼주기' 공약을 비판하지만 윤 후보 역시 연금이나 건보료 등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을 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li> <li>-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나?</li> <li>-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li> <li>-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된 정책을 꼽자면?</li> <li>-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나.</li> <li>- 그렇다면 윤 후보만의 해법은 있나.</li> <li>- 당 대표는 물론 당내 경선 경쟁 후보들과의 내용은 완전히 봉합한 것인가?</li> <li>- 지역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윤 후보가 가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li> <li>-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li> <li>- 수도권 일극체계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2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다.</li> <li>- 산업은행 이전을 전격 공약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두에 둔 공약인가?</li> <li>- 지역 형평성, 노조 반발 등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관철할 계획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li> <li>- 고준위 방폐장 등 주민 합의가 필요한 지역 현안이 많다.</li> <li>- 정치 개혁의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li> <li>-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은?</li> <li>- 10년간 정치 행보를 돌아본다면.</li> <li>- 정치 개혁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li> <li>- 대선이 40여 일 남았지만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데.</li> </ul>

〈표7〉 부산일보 대선후보 인터뷰 질문 목록